

# 연구노트

- 매체융합 환경에서 여성의 매체 · 정보 이용과 생산현황 및 활성화방안  
이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김종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 평가 및 개선방안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Ⅳ) :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매체융합 환경에서 여성의 매체·정보 이용과 생산현황 및 활성화방안

이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새로운 매체 환경의 성인지적 검토의 필요성

“매체융합 환경에서 여성의 정보 생산 및 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의 2013년 과제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 기술의 혁신에 따라 방송, 영화, 통신 등 매체 별로 콘텐츠가 분리되어 생산, 이용되지 않고 매체를 넘나들며 융합하는 현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방송, 통신, 콘텐츠 사업의 융합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매체 환경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방송과 통신은 각각 고유한 존재이유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서로 기능을 공유,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소비자)는 다양한 채널과 단말기를 통해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 통로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따라서 정보·콘텐츠 접근과 이용에 있어 이용자 집단의 분화를 유발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위상과 역할도 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으로 과거에 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만을 하던 수용자가 이제 남의 콘텐츠를 배급, 재전송하거나 스스로 글이나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하는 등 콘텐츠 생산의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이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매체환경은 이용자의 유형(연령, 학력, 계급,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다양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기회이면서 동시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 이용권이 시민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현재에 모든 사람이 정보의 보편적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교육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성별은 정보 이용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매체환경에서의 성별 정보 격차와 이 환경이 사회의 성평등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매체의 발전이 성평등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소셜미디어 : 온라인에서 참가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성립되는 개방화되고 비공식적인 언론으로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북마크, 비디오 공유 사이트, 사진 논평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회원 사이의 온라인 링크를 통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교환하는 서비스로 인관관계를 형성, 유지하는데 서비스의 목적이 있음, YouTube, Face, Twitter 등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서 매체 · 정보 접근, 이용 및 콘텐츠 생산의 젠더 차이를 조사하고 그것이 여성의 수용자 권리와 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환경에서 여성의 매체 · 정보 접근, 이용 및 콘텐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성별 매체 · 정보 접근, 이용 및 콘텐츠 생산 현황을 조사한다. 즉, 정보 기기 소유 및 이용 현황, 온라인 활동량과 내용, 적극적 매체 이용 및 정보 생산활동 현황 등을 본다. 다음으로 여성의 매체 이용 동기, 기능, 역할, 장애요인을 각종 매체 및 콘텐츠 이용의 동기 및 부여하는 기능과 역할, 각종 매체 및 정보 접근 및 이용의 장애요인, 각종 매체 및 정보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성취감과 자존감의 상관 등을 통해 탐색한다. 또 매체 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 여성의 성별 매체 · 정보 접근, 이용 및 콘텐츠 생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관련 이론 검토외에 기존 통계 수집 및 재분석, 델파이 전문가 조사 및 회의, 수도권 15세 이상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이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성별 정보 기기 소유 및 이용 현황, 성별 온라인 활동량과 내용, 성별 적극적 매체 이용 및 정보 생산 현황, 여성의 각종 매체 및 콘텐츠 이용의 동기 및 부여하는 기능과 역할, 여성의 각종 매체 및 정보 접근 및 이용의 장애요인, 여성의 매체 · 정보 접근, 이용 및 콘텐츠 생산 장애요인 및 장애해소를 위한 요구사항 등을 질문할 것이다. 이 외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의 사례조사를 병행한다.

## 기대효과

새로운 매체 환경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여성의 매체, 정보 이용의 특수성 도출하며 성별로 매체, 정보 이용과 사회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정보 접근, 이용, 생산의 활성화, 온라인 상의 성차별 요소 해소, 정보 접근, 이용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 기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김 종 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배경 및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정책의 핵심으로서 생계급여 뿐 아니라 자활사업,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복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을 통한 빈곤완화는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 가능성이 높은 위험계층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저임금 여성근로자, 비경제활동여성의 빈곤계층 유입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빈곤정책은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개인단위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 2. 주요 연구내용

근로의 문제로 빈곤을 해결하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근로연령대인 15세 이상 54세 이하 인구 중에서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60% 미만인 상대적 빈곤인구로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과 노동시장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수집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2005~2009)이다.

기존 연구에서 가구단위 접근으로 인하여 가시화되지 않던 젠더관련성에 주목하여 가구에 속한 개인 여성 근로빈곤의 규모를 밝혀내고 여성근로빈곤인구의 분포와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 정책이 취업과 탈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성 근로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의 특성과 문제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1) 여성 빈곤의 심화

상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빈곤한 남녀 가구주는 여성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빈곤층의 규모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15세 이상 전연령대의 빈곤 여성가구는 2005년~2009년동안 약 228천 가구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가구는 동기간 약 358천 가구가 감소하였다. 전체 여성 가구주 중에서 상대적 빈곤 상태의 여성가구는 2009년 기준으로 51.6%, 남성가구주 중 상대적 빈곤가구는 17.9%로 나타나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2) 빈곤층 여성의 경제활동

가구주 뿐 아니라 빈곤한 개인전체를 분석한 결과, 남성 빈곤층과 여성빈곤층의 취업자 비중은 남성은 약 50%내외, 여성은 40%내외로 여성들의 취업자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낮다. 그러나 전체 남성과 여성의 취업자 비중과 비교하면 빈곤층의 남녀 취업자 비중의 격차는 적은 편이다. 여성빈곤층의 노동시장 여건이 변동성이 크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여성들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계층에게 나타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높은 실업률과 고용지위의 악화이다. 55세 미만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비교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상용직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빈곤층의 상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보험 가입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도 24%수준에 그쳤고 관측기간 5년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여성빈곤층은 취업한다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근로연령대인 55세 미만에서 근로가능 집단은 여성이 더 많고, 취업자는 여성이 더 적어 향후 빈곤층 근로연령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발굴이 여성을 중심으로 더 필요하다. 실제로 이중차이모형을 이용한 정부취업지원의 효과 역시 여성에게 유의하게 나타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빈곤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성들은 가사, 학업, 양육의 사유가, 남성은 근로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집단의 비중이 매우 커서 여성들의 근로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과 가사의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젊은 세대의 빈곤이 확대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 3.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각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근로빈곤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제고와 교육-고용 이행 정책,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였다. 장년층은 이후 노후 빈곤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고용지원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정책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 평가 및 개선방안

송 호 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5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부장제도에 뿌리를 둔 “가(家)”를 중심으로 편제된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5.17. 법률 제8435호)되고 2008. 1. 1. 시행된 이후 2013년 시행 5주년을 맞이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제도의 절차법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제정시부터 이미 그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있어왔다.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안’ (2005.9.28. 노회찬 의원 등 발의, 동년 9.29.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법원안’ (2005.12.28.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동년 12.30.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법무부안’ (2006.3.3. 법무부 제출, 동년 3.6.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이 각각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과정이 짧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이 관장기관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유립과 보수층의 반대를 의식하여 대안입법이 추진되어 여전히 가족 중심적이고,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입법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가족관계등록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논의는 주로 도입초기의 이와 같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후 2010년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 복수국적자, 양부모기재, 일부증명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10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되는 점들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즉,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민법상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의 법적 의미 규명 및 가족관계등록부에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재혼가정의 증가와 1인 가정의 증가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정 시부터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역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입양특례법 시행이후 문제되고 있는 현안 이슈들과 관련하여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공시문제, 출생·신고의 신고제·통보제 등의 문제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특례법제정, 법개정 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개선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역시 남아 있다. 그리고, 성전환자, 무적자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한 고려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바야흐로 시행 5년이 지나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가족관계등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문제점, 그리고 호적제를 대체하는 의의 및 효과 등 지난 5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5년간 축적된 관련 사례들을 조사·분석하고, 2010년 개정을 거친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을 검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을 평가하고, 관련 법제 및 문헌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을 둘러싼 논의 및 발의되었던 각 제정안들에 대한 분석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를 검토·평가하고 2010년 일부개정 과정 및 발의된 개정안들을 둘러싼 논의 및 개정 내용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제조사·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서의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규명하고, 부계혈연을 반영한 호적제도상의 ‘본적’이 그대로 명칭이 바뀐 채 잔존하게 된 ‘등록기준지’의 의미와 개선방향, 가족관계등록부의 편제별 분석, 신고·정정·변경·발급 등 절차적인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법률과의 관계 즉, 실체법인 민법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반영하는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있어서 기재되는 가족의 범위 및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민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민등록법과 연동에 관련된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을 평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협력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간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접수된 관련 상담사례를 조사·분석한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무원, 가정법원 판사, 학계의 가족법 전공 교수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을 받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 및 시행 이후 5년간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례를 분석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법학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Ⅳ) :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통적으로 동양사회에서 노인은 삶의 경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받는 연장자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기를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생애 쇠퇴기로 보게 되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은퇴와 함께 경제적 생산 활동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되었지만 대안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많은 노인들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축소되면서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는 등 오늘날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과 질병, 방임과 학대, 골절이나 낙상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여성노인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성역할에 따라 가정 내에서 평생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고 노후에도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 등 돌봄의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자녀들에게서 노후에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세대 여성노인은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양에서 방치되어 있으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노인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의존도는 높지만 노년후기까지 은퇴 없이 손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들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나 자식들은 노부모를 봉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가족 내 역할 규범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성노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만성질환과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인 노인집단 중 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령여성 자체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인 시대의 흐름이며, 앞으로 중장년층의 증가로 인한 여러 사회적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노인을 사회경제적 생산활동의 참여가 불가능한 잔여적 인구로 정의하고 수동적인 돌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층이 겪는 심리적 소외나 방임과 같은 정서적 문제, 가족의 학대나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나 경제적 빈곤의 문제, 주거·교통·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최근 독거노인의 빈곤화와 노인자살의 급증 등은 사회와 경제,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모두 소외받고 있는 취약한 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이번 연구에서는 심리적·사회적 영역으로부터 신체적 영역, 경제적 영역, 공간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망라해서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여성노인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여성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먼저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정서적 무관심, 심리적 학대, 가족의 방임,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 사회 참여활동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돌봄의 결여, 노인대상 폭력과 범죄, 노인학대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돌봄의 결여, 실업, 취업기회의 부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의 존재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빈곤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노인의 공간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공간적 배려결여, 주거, 교통의 접근권 제약, 노인질병 관리 및 의료적 기회의 취약, 지역공동체의 소외, 사회참여활동 기회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